

保 健 福 祉 部

保 健 福 祉 部

1. 總 括

지시사항 건수		완 료	관리종결	추진 중		미 착 수	비 고
				정 상	부 진		
총 계	42	24	-	18	-	-	-
단독주관사항	20	11	-	9	-	-	-
공동지시사항	22	13	-	9	-	-	-

2. 指示事項 目錄

○ 完了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20	05-43-01	종교계의 복지참여 활성화	1998.12.31
124	05-43-04	한시생활보호사업 적극 추진	1998.11.30
125	05-43-05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의 공평한 부과 방안 마련	2000.11.30
126	05-43-06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적극 추진	1999. 5.10
182	05-43-08	노인복지담당부서 격상 방안 검토	2000.12.30
188	05-43-09	국민연금실시에 대한 홍보강화	2000.11.30
190	05-43-10	국민연금실시에 철저한 보완과 차질없는 시행	2000.11.30
262	05-43-11	수해로 인한 보상 기준의 일괄성 유지	1999. 9. 7
301	05-43-12	설 연휴 소외 계층 위문	2000. 2. 5
306	05-43-13	복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2000.11.30
421	05-43-18	故 이수현군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강구	2001. 2.28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완료연월일
10	03-70-01	실업세부대책 수립	2000.12.30
48	08-70-03	경제정책 대외 홍보 강화	2000.12.30
137	03-70-08	각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2001. 2. 2
138	08-70-09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998. 9.30
164	07-70-15	컴퓨터 2000 문제 관련	2000. 3. 4
175	08-70-16	공정한 인사행정	1999.12.22
183	09-70-17	설 연휴 대책	1999. 3.16
276	08-70-27	8.15 경축사 후속 대책의 철저한 실천	2000.12.30
304	03-70-32	각 부처의 개혁방안 보고	2000. 4.24
332	08-70-34	공정한 선거관리	2000. 4.13
366	09-70-39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2000.11.30
382	08-70-41	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	2000. 9.12
410	08-70-50	설 종합대책 마련	2001. 1.27

▲ '98 - '00년 완료사항은 「1998년 -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책자 참조요망

○ 管理終結事項 : 해당사항 없음

○ 推進中인 事項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21	05-43-02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철저	〃
22	05-43-03	병원의 의약품 구입 비리 근절	〃
181	05-43-07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345	05-43-14	노인 복지대책 강화	〃
370	05-43-16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	〃
429	05-43-21	금연대책 적극추진	〃
430	05-43-22	양성자 가속치료기 설치	〃
536	05-43-23	콜레라 등 후진국병 방지대책 추진	〃
542	05-43-24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점검	〃

일련번호	코드번호	지 시 제 목	비 고
157	09-70-12	방일 후속 조치 철저	정상
264	08-70-25	빈틈없는 수해 대책의 추진	"
282	08-70-29	대국민 과제 홍보	"
298	03-70-31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	"
387	03-70-48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422	05-70-51	인사청탁 근절	"
521	05-70-57	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	"
525	06-70-58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531	07-70-58	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3. 完了指示事項

1) 故 이수현군에 對한 政府 支援 方案 講究 : 421(05-43-18)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30일, 제5회 국무회의시)

- 이국땅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이수현군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 훈장을 추서 하는 방안 강구

나. 措置內容

- 훈장 등 영전수여
 - 전수일시 및 장소
 - 2001. 1. 30(16:30) 김해공항 노제 거행시
 - 훈장종류 : 국민훈장 석류장
 - 전수자 : 사회복지정책실장
- 의사자 심사결정 및 보상금 지급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사자 결정(2001. 2. 2)
 - 보상금 지급 : 128,400천원
 - 훈장증 송부 : 2001. 2. 28

다. 事業成果

- 故 이수현군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차원의 예우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 및 의사상자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홍보 효과를 거둠

共通 1) 各 部處의 經費節減努力 強化 : 137(03-70-08)

가. 指示內容(1998년 8월 11일, 제35회 국무회의시)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계획 수립·시달(2000. 2. 17)
- 2000년도 예산절약 실적 보고(2001. 1. 29) → 예산절약성과금심의위원회
 - 행정경비 : 관서운영비 등 445백만원 절약
 - 사업비 :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 개보수공사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묘지관리 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146백만원 예산절감. 다만, 사업비 예산절약사업이 당해연도 비예산사업인관계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事業成果

- 경상경비의 경우 자율 절감계획을 통해 기관운영상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 사업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내지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실적은 없으나, 예산절약 분위기 확산에 기여

共通 2) 설 綜合對策 마련 : 410(08-70-50)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9일, 제2회 국무회의시)

- 설 연휴를 맞아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람

나. 措置內容

- 각부처 및 산하단체, 주요경제단체 등에 따뜻한 설 보내기 운동 참여요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직자는 전국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주위의 불우이웃 방문토록 권장

다. 事業成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등이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
-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불우이웃(무의탁 노인, 저소득 가정, 실직 노숙자)을 대상으로 공동 차례, 사랑의 떡국 차려드리기, 설상 차리기 등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의 외로움을 덜어줌

4. 推進中인 指示事項

1) 食品醫藥品安全管理 徹底 : 21(05-43-02)

가. 指示內容(1998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식품과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에 대한 위반은 반공익사범으로 처리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식품·의약품 규격·기준의 합리적 개선
 - 전통식품 및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한 식품원료 확대 인정
 - 두부류 제조시 대두분 및 일정기준의 해수사용 인정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선
 - 잣잎 등 40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54종 설정 및 24종 농약시험법 제정
 - 식품첨가물 지정 및 기준 개정
 - 에리스리톨 등 10품목 지정 및 활성탄 등 89품목 성분규격, 사용기준, 정의 개정
 - 축산물중 항생물질 기준·규격 마련
 - 스펙트노마이신 등 항생물질 34종(신규 27종)
- 국민다소비식품과 유통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해사범 등에 대한 벌칙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 식품위해사범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3천만원 이하 벌금→1억원 이하
 -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중앙기동단속반」을 상설 감시기구로 전환
 - 정원 11명(서기관 1, 6급이하 10)
 -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강화
 - 식품 수거·검사 78,166건, 유통의약품 2,335건
- 식품·의약품 등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53 → 63개업소로 확대
 - 수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을 29 → 35개 기관으로 확대
 - 우수약품등록제도(DMF) 도입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
 - OECD수준의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GLP) 구축
 - 일반독성 및 발암독성분야 전산화 보완
 - 유전독성분야 시험 진행중
 - 실험동물자원센터(ICLA) 구축
 - 국제실험동물인증협의회(AAALAC) 인증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적합한 생물학적제제 실험동 신축중

다. 向後 推進計劃

-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규격·기준으로 지속적 개선
-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지방식약청에 「식품전담조사반」 신설 추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및 수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 확대
- 국민다소비식품(75,000건) 및 유통의약품(2,300건) 수거·검사 강화
- 가칭「공정서편찬협회」 및 「실험동물관리법」 제정 추진

2) 病院의 醫藥品 購入 非理 根絶 : 22(05-43-03)

가. 指示內容(1998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病院의 醫藥品 구입비리 근절
 - 病院에서 藥품을 구입할 때 비리가 많아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런 비리를 근절할 것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醫藥品 유통개혁 기본계획 수립 보고(1998. 9. 19) 및 세부계획 확정(1999. 8. 13)
- 醫藥品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999. 10. 1) : 醫藥品포장에 바코드 부여 의무화
 - 醫藥品유통정보시스템 구축(2000. 4 ~ 2001. 5)
 - 주문거래시스템 운영 개시(2001. 7. 1)
 - 醫藥品 유통정보시스템 관리법인 설립추진준비위원회 가동(2001. 4. ~)
 - 물류조합구성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2001. 3. 27)
 - 醫藥品물류협동조합 법인설립 인가(2001. 7. 5)
- 의료보험 약품대금 지불절차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보험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1999. 1. 6)
 -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정(부령) 제정(2001. 7)
- 의료보험약가등 제도 개선
 -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1999. 11. 15)
 -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가 미달인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1999. 11 ~ 2000. 9)
- 부조리 척결 적극 노력
 - 醫藥品거래질서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1998. 9 ~ 1999. 8
 - 관련단체의 자율정화 지속 추진

다. 向後 推進計劃

- 醫藥品 유통정보시스템 확산 및 이용활성화
-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지속 실시
- 중앙 및 지역물류센터 설치(2003. 하반기)
- 의·약업체의 자율정화운동등 지속 추진

3) 老人團體에 대한 支援方案 講究 : 181(05-43-07)

가. 指示內容(1999년 1월 27일, 노인의해 사업계획 보고대회)

- 노인단체들이 공동입주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중앙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연구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총사업비 66억원중 2002년도에 15억 확보
 - 철거 및 기초토목공사비 : 12억
 - 설계비 : 3억

다. 向後 推進計劃

- 나머지 사업비 51억원은 연차 계획에 의하여 추가확보 계획

4) 老人 福祉對策 強化 : 345(05-43-14)

가. 指示內容(2000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늙어서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며, 노인의 행복이 국민전체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임
- 노인의료제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보건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건강한 노인에게는 직장을 주거나 일감을 알선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 추가지시(2001년 5월 8일, 제18회 국무회의시)
 - 노년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대책 강구(8.15 경축사 후속조치)
 - 자식이 직접하는 사적인 효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행하는 사회적 효 또는 공적인 효가 병행되어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 요양시설 신축 : 6개소
 - 전문요양시설 신축 : 12개소
 - 치매전문병원 3개소 신축(2003년까지 18개소 운영 예정)
 - 노인본인부담금 감면대상 확대(70세이상 → 65세이상)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시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
 - 노인공동작업장 지원(2001년 35개소)
 -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 : 70개소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
 - 경로연금 확대(715천명 → 800천명, 199,867백만원 → 246,000백만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월 84만명(673개소)
 - 치매요양시설 확충 : 41개소
- 노인복지정책 추진
 - 총리실에 민관합동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구성·운영중

다. 向後 推進計劃

- 노인의료복지시설확대사업은 예산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운영(5개소→20개소)
-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노인종합대책 수립(2002. 상반기중)

5) 醫藥分業의 差跌없는 推進 : 370(05-43-16)

가. 指示內容(2000년 6월 27일, 제27회 국무회의시)

- 의약분업 예정대로 시행
-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것임
- 이해집단 설득을 통해 추진
- 약사법개정도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대국민 홍보·교육
 - 공무원, 시민 등 200만명 교육
 - T.V 200회, 라디오 610회
 - 리플렛 등 900만부 제작 배포
-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2000. 8월)
 - 의·약계로 의·약·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합의안 마련(2000.11월)
 - 합의안이 반영된 약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상정(2000.12월) 및 공포 시행(2001.8)
- 의약분업 성과 점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한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2000. 8월)
 - 1개 운영위원회 및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의약분업평가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의약분업평가단」 주관의 “의약분업 평가 정책 토론회” 개최(2001.7.2)
- 국민불편 해소대책 적극 추진
 -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01.8.14약사법 개정으로 '01.11.15부터 시행)
 -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01.12.)
 - 전문 14개 성분, 102품목을 일반으로 전환, 일반 7개 성분, 41품목을 전문으로 전환
 - 장기투약환자의 편의를 위해 종래 60일로 한정하던 처방일수 제한 폐지('01.7)
 - 공휴일에 약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 활성화('01.7)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2000.10월~2001.1월, 2001.5월~12월)
 -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80개 특별감시팀 구성 운영
 - ※ 담합행위·변경조제 등 1,958건의 불법행위 적발
 - 담합행위에 대한 관련법령 보완(2001.12)
 - 담합행위 유형 구체화, 우선 감시 근거 마련, 포상금 제도 실시 등

※ 시행성과

- 의약분업의 실시로 후진적인 의약품 이용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각각 전문영역을 담당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
- 2001년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제도 적응단계 진입
 - 처방전 소지 환자가 첫 번째 방문 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 증가
 - 6%('00.8월) → 97.3%('01.11월)
 -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주사제 등의 사용량 크게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주사제 품목수가 분업전에 비해 각각 23.3%, 31.2% 감소
 - 항생제·주사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수도 2001.3/4분기에는 2001.2/4분기에 비해 각각 12.81%, 47.25%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도 분업전에 비해 10.53% 감소

다. 向後 推進計劃

-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운영내용을 지속 평가하여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 실시
- 담합,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
- 약품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재정 안정 도모

6) 禁煙對策 積極 推進 : 429(05-43-21)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담배는 암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등 피해가 많음
-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금연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솔선하여 금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금연종합대책 수립
 - 1차 관계부처 협의(2001.3.6), 국무총리 보고(3.14), 대통령 보고(4.3), 금연대책 토론회(4.26), 제2차 관계부처 협의(8.3), 금연종합대책 확정(11.20)
 - 중앙정부청사,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교실, 의료기관 등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강화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차단,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강화, 금연실천지원 등 금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금연교육 및 홍보
 - 금연공익광고 실시
 - TV광고 3편(2001. 5월 ~ 11월), 라디오광고 3편(2001. 5월 ~ 12월)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행위 등 법 운영실태 점검(2001. 9월 ~ 10월)
 - 청소년건강캠프 개최(대상 : 중학생 785명)
 - TV·영화 등에서 흡연장면 방영자제 협조서한 발송(방송작가 등 556명)
 -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실시(전국 중학교 120개교)
 - 2002 월드컵을 금연월드컵으로 추진(관람석은 금연구역으로 운영)
 - 금연지도자교육 실시(5회 327명)
 - 흡연자 건강검진 실시(40대 이상 흡연자 5,496명)
 - 직장인, 지역주민 및 군장병 대상 금연교육 실시(26,166명)
 - 범국민금연운동본부 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인 금연사업 추진기반 마련(2001. 12. 10)

다. 向後 推進計劃

- 금연구역확대 등 법적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2002년 상반기)
 - 중앙청사,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원칙적으로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
 - 일정규모 이상 대중음식점 등은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운영
 -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점검 강화
 - 금연사업확대
 - TV·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한 금연홍보 강화
 - TV 드라마 등의 흡연장면방송 자제 협조 요청
 - 2002 한일월드컵을 금연월드컵으로 개최 추진
 - 금연교육강화
- 금연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금연사업 확대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의 상향조정 추진

7) 陽性子 加速治療機 設置 : 430(05-43-22)

가. 指示內容(2001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우리나라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암치료기술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성자 가속치료기(Proton Therapy)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암 치료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사업개요
 - 양성자가속기·전달장치 및 치료장비 등 장비(360억원)와 부속건물 1,800평(120억원)등 건립 추진
 - 추진기간 : 2001 - 2004
 - 소요예산 : 480억원('02 : 100억원, '03 : 296억원, '04 : 84억원)
- 사전 준비
 - 국립암센터에 양성자치료기 도입팀 구성(2000. 10)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12 - 2001. 5)
 - 미국의 하바드대학병원·Loma Linda병원 방문조사(2001. 2)
 - 양성자치료센터건립추진단 구성 운영(2001. 10 -)
 - 양성자치료 심포지움 개최(국립암센터, 2001.11)
- 예산안 협의 및 '02 예산 확보
 - 총사업비 예산처와 협의(480억원)
 - 2002년 예산에 100억원 반영

다. 向後 推進計劃

- 2004년 말까지 건축공사 및 장비설치 완료
 - 사업제안요구서(RFP) 작성 : 2001. 12 - 2002. 2
 - 입찰 및 계약체결 : 2002. 3 - 6
 - 건축설계·시공, 장비설계·도입·설치 : 2002. 7 - 2004. 7
 - 검사 및 시험가동 : 2004. 8 - 2004. 12
- 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운영체계 구축
 - 2002년 상반기 중 「양성자치료센터」 직제 설치
 - 2004년까지 「양성자치료센터」 운영지침, 양성자치료 수가기준 등 마련
-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환자진료 개시

8) 콜레라 등 後進國病 防止對策推進 : 536(05-43-23)

가. 指示內容(2001년 9월 26일, 제37회 국무회의시)

- 최근 콜레라를 비롯하여 홍역, 말라리아 등 후진국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보건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후진국병이 재발치 않도록 대처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전염병관리법(61종) 기본관리사업 지침 제정
 - 주요 전염병관리 세부관리지침 제정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과 전염병관리 등 장기계획 수립
- 주요 전염병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조감시체계 구축과 보건요원의 현장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한 전염병관리의 전문화 추진
 - 민간 병·의원 질병정보 모니터망 19,430개소, 콜레라 보조감시관 78개소 및 의료기관 253개 지정·운영
- 전염병관리체계 강화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실시(5.1-10.20)
 - 금년 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조치로 유행을 조기에 종식(8월-10월)
 - 홍역퇴치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접종확인 사업 및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연령층에 대한 홍역 일제예방접종 실시(1월-7월, 97.7%)
 -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제도 정착(6월-9월)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콜레라 등 水因性전염병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협조하에 대대적인 교육·홍보활동 실시
 - 대국민 홍보활동
 - 집단 발병가능 전염병의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홍보 및 발생시 즉각 대처
 - 각종 질병별 홍보물 제작·배포(수인성 전염병예방 요령 등)

다. 向後 推進計劃

- 민간의료기관의 전염병 신고 체계 확립
 - 의료기관과 보건소간 전염병 정보망 단계적 구축
 -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강화
- 일선 보건소 등의 현장 대처 능력 향상
 - 전염병담당 전문요원 육성(260명)하여 방역관리·초기 역학조사 등 담당체계 확립
 - 시·군·구 일선에 대한 시·도의 전염병 조사 지원능력 향상.
-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관리 비상근무 실시 등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등에 대한 집중보건검사
- 주요 질병별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 말라리아, 설사 등 주요 질병별 관리 대책반(조사·관리·연구 등) 구성·운영

9) 基礎生活保障制度 施行 點檢 : 542(05-43-24)

가. 指示內容(2001년 11월 27일, 제51회국무회의시)

- 날이 추워지는 연말에 홀로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지부 장관은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

	'99년		'00년		'01년		'02년
- 생계급여 대상자 :	54만명	→	149만명	→	151만명	→	155만명
- 1인당 급여수준 :	98천원	→	141천원	→	182천원	→	204천원
- 기초생활보장예산 :	1.85조원	→	2.33조원	→	3.24조원	→	3.38조원

- 보호의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선정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례기준(特例基準) 적용·보호(29천명)
- 부양기피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가 우선 보호(8천명)
- 주민등록말소자, 노숙자 등은 '기초생활보장번호제'를 도입하여 특별 보호(9월말 현재, 651명 보호 조치)

- 부정수급 방지 등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 국세·토지·국민연금·실업급여 등 소득·재산 전산조회체계 구축
 - 시·군·구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득·재산 수시 조회 실시(350만건)
- 수시조회가 어려운 금융자산 전국 일제조사 실시(107만건)
 - 적용결과, 15천가구 자격상실, 2천가구 보장비용 징수

-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강화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 63천명('00) → 81천명('01)
- 자활성공사례 : 6천명
- 공동체 창업지원 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 70개('00) → 200개('01)

다. 向後 推進計劃

- 근로소득공제 전면 시행 준비

- 현재, 학생·장애인 등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10~15%)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추진
 - 전국 3만6천 가구(전체 수급자의 5%)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적정 공제방식 및 공제율 도출 예정(2002년)

- 소득인정액 제도 도입준비 철저

- 2003년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서 소득단일기준(소득인정액)으로 변경 예정(법정 사항)

-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보호 추진
 - 기존 수급자 일부 탈락 및 급여감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제도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전준비 철저
- 부정수급자 방지 철저
- 금융자산조회 연간 1회 이상 정기 조사 : 향후, 금융실명제법상 본인 동의 요건 완화 추진
 - 고용보험(임금소득),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전산망 연계 확대 추진('02 상반기)
 - 근로능력자에 대한 분기별 소득재산 변동상태 조사 강화
-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확대 : 14천명('01) → 30천명('02)
 -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점포지원사업 확대 : 8개소('01) → 20개소('02)
 - 자활근로사업·재활프로그램 확대 및 음식물·폐자원 활용, 집수리·간병도우미 등 저소득층 자활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확충
- 사회복지공무원 1,700명 확충 : 5,500명('01) → 7,200명('02)
 -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진작
 -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6급이상 승진기회 부여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자활전담조직(自活專擔組織) 설치

共通 1)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가. 指示內容(1998년 10월 12일, 제47회 국무회의시)

-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방일성과의 실효성은 양국간에 문서로 합의한 43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
 -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상호 정보·의견 교환 실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제1차('94. 4), 제3차('95.10), 제4차('96.10) 한·일 신경제협력기구협약에서 동 문제를 의제로 상호 의견 교환
- '97.4.18 일본 후생성에서 한·일 차관회의시 조속한 시일내 협정체결 실무회의 개시에 합의
 - '98.8 양국간 사전 정보교환 및 교섭회의 개최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국민연금제도 설명자료 송부
- '98.10 대통령 방일시 양국간 정보교환 추진에 합의
 - '98.10.19 표제협정추진관련 사전 정보교환 추진을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측에 다시 협조 요청
- '99.1.9 국민연금법개정('98.12.31) 관련 주요 개정내용 등에 관한 설명 자료 송부
- 2000.1.29 「한·일조약국장회의」시 표제협정의 필요성과 실무회의 개최 적극 검토 요청
- 2000.5. WHO 총회에서 한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일본의 후생성장관간에 표제협정에 대해 논의
 - 일본측은 실무교섭회의 개최를 늦추자는 입장 전달
 - 2000.9월 한일정상간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협력추진 합의
 - 2000.10.31~11.1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제1차 설명회 개최(일본 후생성)
- 2001.5 WHO에서 보건복지부차관과 일본후생성차관 면담
 - 2001년 하반기중 제2차 정보교환 담당자 회의 개최 제의
- 2001.8.31 보건복지부장관과 일본후생성장관 면담
 -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
- 2001.10.15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은 협정 체결교섭의 조속한 개시를 희망
 - 2001.12.20~12.21 한·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예비회담 개최(한국 외교통상부)

다. 向後 推進計劃

- 2002년중 일본에서 예비교섭회담 개최 예정

共通 2)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가. 指示內容(1999년 8월 3일, 제29회 국무회의시)

-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큰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대비해 주기 바람.
- 특히, 지난 2년간의 수해를 거울삼아 충분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 추가지시
 - 철저한 수해대책의 수립(1999년 8월 10일, 제30회 국무회의 보고시)
 - 추석대책 만전(1999년 9월 7일, 제34회 국무회의 보고시)
 -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1999년 12월 28일, 제53회 국무회의 보고시)
 - 해빙기 대형 사고와 수해예방(2000년 3월 21일, 제12회 국무회의 보고시)
 - 철저한 재해 예방(2000년 8월 1일, 제32회 국무회의시)
 -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2001년 7월 16일, 제29회 국무회의시)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의연금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국고 등의 지원 범위 확대
 - 의연금 부담부분 등 주택과손·유실, 침수주택수리비, 세입자보조비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제도개선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행정자치부에 개정 요구('99.12)
 - 행정자치부에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2000.7.1 시행)
- 특별위로금 지원기준 통일
 - 특별위로금의 지원이 매년 달랐으나 지원기준을 통일하여 일정하게 지원
 - 의연금관리·운용규정 개정('99.12)
- 재해구호법 개정
 - 재해구호법을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관계부처협의 : 2000.10.13
 - 입법예고 : 2000.10.27
 - 국무회의 : 2000.12.05
 - 국회 본회의 : 2001.11.22
 - 공 포 : 2001.12.19

다. 向後 推進計劃

-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이재민들의 불만 제거
- 재해구호법의 취지에 따라 재해구호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

共通 3) 對國民 課題弘報 : 282(08-70-29)

가. 指示內容(1999년 9월 21일, 제37회 국무회의시)

- 내년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며, 각 부처는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지를 소상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림
-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홍보가 매우 중요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안 설명
 - 사업단위별 관련자료에 의한 기자단 설명회 개최
 - 각 실·국별 정례 브리핑을 통한 예산안 설명
- 국정과제 브리핑 실시
 - 보건복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정례 브리핑제도 도입
 - 각 실·국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기초생활보장등 보건복지의 주요정책방향 및 추진실적을 385회에 걸쳐 브리핑 실시
 -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대 국민홍보
 - 건강보험, 국민연금, 금연대책, 암 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건복지의 주요정책관련 홍보자료(책자, 리플렛, 포스터, CD-ROM 등)에 의한 국민의 이해 제고
- 방송·광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홍보실시
 - TV광고
 - 국민건강보험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가입안내, 의약분업 실시 및 국민연금을 수혜자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
 - 신문광고
 - 국민건강관련 「건강보험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건강보험료채납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국민의 이해 제고
 - 방송출연
 - KBS-TV, 라디오 등 78회의 방송출연을 통한 적극적인 대 국민 계도·홍보
 - 각종 언론인터뷰
 - 각종 일간신문 및 의약전문지 등 언론인터뷰를 통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31회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 인터넷을 이용한 보도·홍보자료 제공
 - 50여개 언론사 및 의약전문지 등에 483회의 보도·홍보자료 등 제공

다. 向後 推進計劃

- 보건복지의 주요현안, 정책방향 등 관련 보도자료의 적극적인 개발 및 자료제공
-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등에 대해 사전 기획을 통한 홍보의 효율성 제고
- 적기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계도·홍보
- 국정과제에 대한 정례브리핑 실시로 보건복지정책의 이해도를 높임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강화

共通 4)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에 主力 : 298(03-70-31)

가. 指示內容 (1999년 9월 7일, 제34회 국무회의시)

- 정부는 내년에 중산층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 데 주력해야 함
- 관련법이 마련되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차질없이 조기집행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야 함
 - ▲ 추가지시
 - 소득분배 개선대책 강구(2000년 1월 4일, 제1회 국무회의)
 -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분배문제에 관심이 큼.
 - 3대 과업 및 4대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2001년 11월 12일, 제48회 국무회의)
 - 민생안정에 더 노력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
 - 경로연금 지급확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치매병원 18개소, 노인요양 96개소)
 - 장애인 복지수당 지급 (월45,000원)
 - 농어촌 보육아동 무상교육실시 (15만명)
- 사회보험의 내실화
 - '98. 10부터 전국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통일(소득 및 재산에만 보험료 부과)
 -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 통합
 - '99.4. 1 국민연금 확대 실시
 - 기금운용시스템의 운영
- 국민의료기반 확충 등
 -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대상확대 (29만명)
 - 암퇴치 연구사업 추진 (186과제 완료) 및 홍보사업

다. 向後 推進計劃

-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국민불편이 야기되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 및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찾아가는 복지를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보완

共通 5)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가. 指示內容(2000년 10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하여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노사협력을 위한 직장 분위기 쇄신운동 추진
 - 구조조정관련 노사협력 증진
 - 구조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할 것임을 노조측에 이해·설득
- 퇴직금제도 개선
 - 노사합의에 의해 금년부터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2001.5.8)
- 특별퇴직 등 실시로 인원 감축
 -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퇴직, 조기퇴직 등 실시(1,086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원감축
 - 12,357명(2000.7.1) → 11,413명(2001.1.1)
 - 11,413명(2001.1.1) → 10,454명(2002.1.1)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원감축
 - 1,193명(2000.7.1)→1,158명(2001.1.1)
 - 1,158명(2002.1.1)

다. 向後 推進計劃

- 공단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
 - 경영진단결과 경영혁신위원회 보고 : 2002. 1월 하순
 - 공단경영발전계획안 수립 및 추진 : 2002. 2월

共通 6)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가. 指示内容(2001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시)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 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아직도 인사청탁사태가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임.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内容

-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인력의 채용
 - 2001년 제1회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실시
 - 필기시험 실시 : 4. 17
 - 보건직공무원 28명(7급 10명, 9급 18명) 제한공개경쟁 채용 : '01. 5. 19
 - 2001년 제2회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실시
 - 필기시험 실시 : 01. 12. 23
- 동일 직위 장기(2년-3년)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도 운영
 - 4·5급공무원 전보시 2년이상 근무자 15명 전보 : '01. 3.19
 - 2년이상 근무 6급이하공무원 전보 7회 실시(총 92명)
- 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 도입
 - 5급 행정직, 보건직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실시(01. 7. 19, 01. 10. 17)
-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활용

다. 向後 推進計劃

- 채용, 전보, 승진시에 있어서 인사청탁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인력의 채용
 - 동일직위, 장기(2년-3년)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도 운영
 - 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 도입
 -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활용

共通 7) 女性の 職場生活を 위한 要件 造成 : 521(05-70-57)

가. 指示内容(2001년 4월18일, 여성부 업무보고서)

- 젊은 직장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육아문제일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여성도 사회의 주체로써 국가·사회·가정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나. 지금까지 措置内容

-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학계 및 관련단체의 각 대표와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보육발전위원회와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음.
 - 보육발전위원회 제3, 4차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1.5.10(제3차), 7.25(제4차), 보건복지부
 - 참석인원 : 29명(제3차:17명, 제4차:12명)
 - 보육발전기획단 제5, 6, 7차 전체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1.4.6(제5차), 5.3(제6차), 6.19(제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석인원 : 73명
 - 인터넷공청회 실시
 - 기간 : 2001.5.7-5.26
 - 홈페이지주소 : <http://childcare.kihasa.re.kr>
 - 접속건수 : 58,228건
 - 일반공청회 실시(2회)
 - 일시 및 장소 : 2001.5.30-5.31, 8.8, 각 14:00-18: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석인원 : 약 950여명(발표자:16명, 토론자:17명, 보육관계자 : 900여명)
- 보육발전위원회 및 기획단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육비전 및 세부과제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담은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확정(2001.12.13)

다. 向後 推進計劃

-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계획임

共通 8)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가. 指示內容(2001년 5월 29일, 제21회 국무회의)

- 월드컵은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보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관광, 체육시설, 문화행사 등 우리가 갖고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회임
- 각 부처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措置內容

-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18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지역내 중추 응급의료 제공
- 전염병 감시체계 및 예방 강화
 - EDI 전염병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
 - 국립보건원과 시·군·구 보건소와의 전자보고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 감시 및 관리를 역학 조사관 17명 배치
 - 미국 CDC 및 일본 전염병연구소와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
- 「생물테러 비상 대책반」 구성·운영(2001. 10월)
 - 생물테러에 대한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 등 종합적인 관리
 - 생물테러 대비 종합 훈련
 -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부처별 대응조치 및 역할분담 점검(2001. 11. 30)
- 식품접객업소의 환경개선
 - 두루마리 화장지, 불결한 물수건, 끝이 날카로운 가위등 외국인 혐오비품 등을 시·도 및 음식점중앙회 등에 개선 지시(2001. 4월)
 - 외국어 메뉴판 비치, 시설 개·보수 자금 저리융자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시·도에 지시(2001. 6월)
 - 음식문화·식당환경개선 실태 점검 실시(2001. 11월)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시도,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월드컵 개최도시 및接客업소 대상으로 실시
- 고유 전통음식의 홍보
 - 시·도별 대표 고유 전통음식 발굴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각 시·도에 시달(2001. 6월)
- 식품 등 종사자 친절·위생교육실시
 - 도시락, 김밥 등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12만명 교육실시(2001. 6. ~ 8.)
 - 2002년도 식품등 종사자 특별 위생교육 명령(2001. 12. 26)
 - 교육기간 및 인원 : 2002. 1 ~ 5월, 제조업체 등 영업자, 조리사, 영양사등 82만명

다. 向後 推進計劃

- 2002. 1 ~ 5.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 종사자 특별위생교육 실시
- 2002. 2 ~ 4. 음식문화 및 식당환경개선 이행실태 점검
(월드컵정부점검단, 소비자단체등 합동)
- 2002. 3. ~ 5. 도시락제조업소 및 경기장, 관광지등 주변 대형음식점 위생감시실시
- 2002. 6. 제3회 서울국제요리축제 개최 지원

共通 9) 電子政府事業의 차질없는 推進 : 531(07-70-58)

가. 指示內容(2001년 8월 14일, 제33회 국무회의시)

- 정부의 전자문서 처리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함
-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
아울러 국민에게도 잘 알려 국민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기 바람

나. 지금까지 推進內容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관련 실무추진반 구성(2001. 7.16)
 - 한국전산원, 4대보험공단(심사평가원포함) 실무자 상주근무
 - 프로젝트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사업추진기획단 회의 (2001. 9. 18)
 - 환경분석 현황 및 목표모델 설계 등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보고
 - 환경 및 현황분석(2001. 9 ~ 10월)
 - 현행 비즈니스 모델·프로세스 분석
 -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 관련 법·제도 및 표준화 현황분석
 - 제3차 사업추진기획단 회의 및 중간보고회 실시 (2001. 11. 13)
 - 정보연계시스템 ISP 사업 최종결과물 심사완료(2001. 12. 27)
- 복지부·노동부간 협의하여 본사업 설치기관 및 비용분담방안 결정(2001.12.31)
 - 본사업 추진체계는 ISP 추진체계 근간 유지
 - 조직 및 업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치기관 선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다. 向後 推進計劃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단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 지속
 -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확인
- 향후 4대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및 4대 사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